

칼럼

장기채 주필



노인빈곤은 '강 건너 불' 아니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국가다. 거기가 길어지는 노년...

할아버지, 할아버지들의 삶이 고단해진다. 최악 중에서 가장 악하고, 범죄 중에서 가장 독한 것이 빈곤이라 하지 않았던가. 지구촌 최악의 노인빈곤·노인불행·노인 자살 일등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 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세계 최악의 노인빈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중국에는 모두가 빈곤으로 가는 길이 유일한 미래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노인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국가들 중 잘사는 경제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OECD국가들 중 경제순위도 보면 10위권 내에 들어간다. 전 세계 인구 중 25% 정도가 식량난과 식수난을 겪고 있다는 지표를 보더라도 먹을 걱정과 마실 걱정이 없을

뿐 아니라 100만원을 호가하는 스마트폰이 넘쳐나는 사회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노인빈곤이 우리 사회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쨌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률이 49.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인 12.8%보다 무려 4배에 달하는 수치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논하는 시점에서 나온 예상 밖의 놀라운 결과이다. 현재의 노인층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일군 세대다.

또한 높은 교육열로 자녀교육에 모든 것을 바쳐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주었다. 그러고도 대한민국 부모들의 자식사랑은 종교적 맹신에 가깝다. 지식 한 사람을 대학졸업까지 시키는데 드는 양육비가 대략 2억7천여만 원이 든다는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그 교육열을 그

저 칭송하기에는 마땅치 않다고 봐야한다.

바로 과도한 교육비 지출이 노후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깡겨루족'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성인이 된 자녀의 경제적 뒷바라지까지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노후대비는 뒷전이 되었고, 정작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들의 무관심과 노인복지의 미비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슬프게도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 또한 OECD 회원국 중 1위다.

이는 노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반증한다. 예컨대 우리의 부모들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공교육비 사교육비로 지출해 고학력 자식 만들어 놓고 정작 부모들 스스로는 별 노후대책이 없이 영감결에 노년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다 가족 간 유대를 중시하는 정통 가치관이 무너져 자식에

게 기댈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 노인의 삶을 고달플 수밖에 없다.

돌이켜 보면 우리에게도 노인이 한집안의 기둥이자 가장으로 존경받던 시절이 있었다.

1884년 최초의 의료 선교사로 이 땅을 밝은 호러스 알렌은 경로효친의 전통에 감탄하며 조선은 노인들의 천국이라 표현했다.

또 세계적 석학 아널드 토인비는 한국의 효(孝) 사상과 경로사상을 '온 인류의 으뜸가는 사상'이라 말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률을 말하는 '소득보장' 부분이 96개국 중 80위로 노인이 가난한 나라다.

노인이 살기 힘든 나라라는 현실이 몹시 부끄럽다. 게다가 노인이 가해자가 되는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노인빈곤의 명암을 드러내고 있다. 경찰청 통계는 65세 이상 노인범죄가 매년 증가해 2013년에만 무려 7만7천여 건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노인들을 돌보지 않는 사회구조와 열악한 환경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이제 노인복지는 개인이나 가정의 범주를 넘어 국가적인 책무가 되었다. 토인비가 부러워한 우리의 정신문화를 되살려야 한다. 노인이 가난한 나라에서 노인이 행복한 나라로 가는 길을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한다.

社說

건보료 경감 바람직하다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다니 늦었지만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인다.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경감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은 가입자의 성과, 나이, 재산, 자동차, 소득 등으로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을 추정하는 것이다. 평가소득이 폐지되면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은 최저보험료만 내고 나머지는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지역보험료를 매기게 된다.

배기량 1천600cc 이하이면서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소형차는 자동차 보험료를 면제하고, 1천600cc 초과~3천cc 이하이면서 4

천만원 미만인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사용 연수 9년 이상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도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을 조정해 고소득자는 부담이 늘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수 외 소득이 연 7천200만원을 초과할 때 3.08%의 소득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보수 외 소득에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17년 3천400만원)을 공제한 뒤 6.12%의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과부양자도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복지부의 건보료 현실화 정책이 서민들의 삶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기고

김숙희 화순군의회 의원



찾아가서 나눠주는 복지보다 찾아서 돌려주는 복지로

한 나라의 복지정책이 제대로 결실을 맺으려면 다양한 혜택이 대상자들에게 적기에 누수 없이 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상자들의 대부분 노령이어서 정책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제도의 기본틀이 당사자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해 좋은 혜택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복지 혜택 신청절차를 단순, 다양화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혜택을 직접 찾아서 돌려주는 노력을 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나의 예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전기, 가스, 이동통신 TV 수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파악해 신청방법을 안내한 결과, 총 17만5천명이 새로 요금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이동통신사, 한국방송공사는 기초

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에 제 서비스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용 중이지만 대상자가 그 사실을 몰라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감면대상자가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요금고지서를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 센터나 각각의 감면대상 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지난 5월19일부터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서비스는 기존 감면대상에 지역난방요금도 추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고 복지 대상자가 요금감면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올해부터 대상자 발굴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12월부터 화순군 복지조사팀과 함께 찾아서 돌려주는 노력이 지혜를 모으면 가능한 소중한 현장 행정의 체험을 해 왔습니다.

우선 매달 2500원(1년3만원)으로 별도의 고지서가 아닌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부과되는 TV수

신료의 우리군 감면처리 현황 전 수조사를 해왔습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 지역인 우리 화순군도 감면 대상자들은 해당 기관에 가서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청주의 복지정책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었습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시청각 장애인으로 우리군 대상자인 2,803가구 중 59%인 1,679가구가 이 감면혜택을 받고 1,124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장단 회의나 반사회보에 홍보하고 안내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으나 고령으로 인한 거동불편과 인식부족과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우리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미감면 대상가구를 파악하고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찾아 드리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12월말에 207가구를 시

작으로 1월말 184가구, 2월말 377가구, 3월말 264가구, 4월말에 16가구등에 혜택을 찾아 주며, 12개월에서는 전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7월 현재 남아 있는 화순읍의 76가구는 본인거부, 가족집에 거주, 타인명의 장기임대 등으로 혜택을 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5개월간의 노력이 화순군 1,048가구에 감면 혜택을 찾아 주면서 년간 3,144만원의 우리군 사회적 약자들의 살림을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군 사회적약자의 이익을 위해서 한 가구라도 더 찾아 혜택을 드리려는 복지팀원들의 열정적인 노고를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같은 감면서비스가 기초생활 수급자는 1988년7월1일부터, 시청각 장애인은 2000년 1월 12일부터 실시되었다고 하니, 좀 더 빨리 조사를 하였더라면 하는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렇듯 복지정책의 성패는 국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제도가 수혜자들에게 남김없이 전달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중한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 혜택을 잘 몰라서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찾아서 돌려주는 복지 정책!' 이어달로 더불어 사는 사회의 밑거름임을 모두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千字文

海 鹹 河 淡

海 鹹 河 淡

▷뜻 : 바다 물은 짜고 민물은 맛이 담백함.

湖南新聞 (062) 224-5800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 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010-5330-553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계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희망의 길

무수한 발걸음이 땅 위에 길을 만듭니다. 땅과 열정이 희망을 만듭니다. 중서민 및 중소기업 중심의 최고 소매전문은행이 되도록 더불어 풍요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이 되도록 광주은행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